

대홍수 사망자 768명...네팔·中, 3천여 실종자 구조 ‘사력’

폭우 추가 범람 우려 구조대·주민 주의령
100여명 생존가능성 있는 발전소 공기 주입
韓정부·기업 헬기 수색은 당국 허가 대기

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규모 홍수 발생 30일(현지시간) 양국 당국이 3천명이 넘는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100명 이상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터널에 진입로를 뚫고 파이프를 통해 공기를 주입하고 있어 기적의 생존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폭우로 강물 수위가 높아져 추가 범람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가 전문 장비·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네팔 중부 바그마티주 일대를 덮친 대홍수로 이날 현재 네팔 내 사망자는 최소 752명, 실종자는 외국인 592명을 포함해 총 2천502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당국이 집계한 시짱(티베트)자치구 지역 사망자 16명, 실종자 546명(외국인 261명)과 합치면 홍수 전체 사망자는 최소 768명, 실종자는 3천48명에 이른다.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 현장 11곳 이상에서 최소 933명의 작업자가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100여명이 터널 안에 고립된 채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중 다수 작업자가 모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트리솔리 3A 수력발전소에서는 네팔군 구조대가 전날 밤 토사에 파묻힌 터널 상부에 드릴을 이용해 진입로를 뚫는 데 성공했다고 수단 구릉 네팔 대우부 장관이 밝혔다.

네팔 군·경찰 등 합동 구조대는 이 터널에 파



30일(현지시간) 네팔 누와코트 지구 트리솔리 바자르 지역에서 수위 급상승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트리솔리 강을 따라 발생한 피해 홍수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 /AP=연합뉴스

이프를 설치해 공기를 주입하고 카메라를 투입하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2시께부터 쏟아진 폭우로 트리솔리 강 수위가 상승, 굴착 작업 구역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작업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다만 이후 상황이 나아지면서 드릴·굴착기·유압 절단기 등 장비를 동원해 작업을 재개했다고 네팔 군 당국은 전했다.

네팔 당국은 또 이날 중국인 4명을 포함해 183명을 구조, 헬기 등을 통해 이송하고 피해가 큰 계곡 지역에 군·경찰 등 1만5천여명을 투입해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네팔 재난관리청은 “라수와 지역

보테코시강(트리솔리강의 상류)의 유량이 더욱 불어났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수색·구조·구호 인력과 강변 지역 주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 바 있다.

계다가 대홍수로 강이 진흙·바위 등으로 막혀 생긴 불안정한 ‘자연담 호수’ 중 일부는 물이 빠르게 차올라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불블버그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에서도 전날 밤 무인기(드론) 감시 결과 기존의 자연담 호수에서 약 28㎞ 떨어진 지점에서 산사태가 발생, 새로운 자연담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짱(티베트)자치구 지룽 통상구

인근의 긴급 구조 인력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으며, 중국 당국은 2차 재해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히말라야 지역의 고난도 터널 구조 작업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도는 터널 전문 구조대 11명을 네팔에 지원했으며, 중국도 터널 전문 구조팀 9명을 네팔에 파견했다.

네팔 정부는 이밖에도 수송용 대형 드론, DNA 검사키트, 시신 보관용 냉동시설 등 수색·구조에 필요한 특수·전문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했다.

또 하루에만 수백구가 수습되는 희생자 시신 부패를 막고 유족의 신원 확인을 위해 냉동보관

시설과 DNA 검사키트를 비롯한 법의학 장비와 인력 등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국 병원 시신 안치실 등이 포화상태가 되고 냉동보관 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시신들이 부패하기 시작하자 네팔 당국은 신원 미상 시신 수백구 중 일부를 매장하기 시작했다.

알리트 바하두르 라이 네팔 외교부 차관은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해 부패해가는 시신들을 매장해야 했다”면서 “여러 국가에 냉동보관 시설을 요청했으며, 1천개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다만 가족들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신의 DNA 시료 채취, 사진 촬영, 식별 정보 기록 등의 작업을 거치고 있으며, 추후 신원이 파악되면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해 힌두교 전통에 따라 화장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카날 장관은 “피해 규모를 조사한 뒤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지만, 우선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약 360만달러(약 50억원)씩, 유럽연합(EU)은 250만달러(약 34억5천만원), 영국은 500만파운드(약 98억8천만원), 말레이시아는 100만달러(약 13억8천만원)의 지원을 각각 약속했다.

유엔은 250만달러의 긴급 지원 자금을 집행했고,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IFRC)은 100만달러(약 13억8천만원) 이상을 네팔 지원에 배정하는 한편 3천100만달러(약 428억원) 규모의 긴급 모금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합동 신속대응팀과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당초 이날 임차 헬기 각각 1대씩 2대를 띄워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는 수색 작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악천후 등으로 인해 네팔군 당국의 운항 허가가 아직 나오지 않아 헬기를 띄우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美, 한달여만에 이란 공격...“라라크섬 로켓 발사대 타격”

이란군 “적의 테러 행위, 강력한 대응”

미군이 30일(현지시간)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라라크섬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로켓 발사대 2곳을 타격했다.

미군의 대(對)이란 군사 공격은 한 달여 만이다. 이번 공격이 전면적 공격 재개 시작일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확보를 위한 선별적 작전일지 주목된다.

로이터 통신, AP 통신 등은 익명의 미당국자를 인용, 미군이 이날 오전 라라크섬의 이란 로켓 발사대 2곳을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기뢰가 장착된 로켓을 발사하려 준비하는 것이 관측됐다는 게 공격의 배경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도 이날 라라크섬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렸지만,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번 미군의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미군의 대이란 공격은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중단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란은 미군의 공격에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다. IRGC 공보실은 공식 성명에서 “라라크섬을 겨냥한 적의 테러 행위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침략자는 응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과 시온주의(이스라엘) 적들은 산적한 내부 문제를 모면하고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 추락하는 신뢰도를 만회하기 위한 절박함에 쫓겨 또다시 사악한 본색을 드러내며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이들의 뻔뻔한 침략 행위로 라라크섬이 공격받았고, 우리 군인과 동포 여러명이 순교(사망)하고 다쳤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日, 대만 주재 대표기관에 핵방공호 설치

대만 타이베이에 ‘일본대만교류협회’ 관련 시설에 일본산 핵 방공호가 설치됐다고 산케이 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여러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봄 일본 기업인 ‘월드넷 인터내셔널’이 만든 지하 방공호가 일본 대만교류협회 사무소의 관련 시설에 설치됐다.

일본대만교류협회는 일본과 외교관계가 없는 대만 주재 일본 대사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비자 발급과 같은 영사 업무, 일본과 대만 교류 실무 등을 맡고 있다.

이곳에 설치된 방공호는 핵·생물·화학 공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방사성 물질 등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환기 장치와 폭풍·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폭문 등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산 핵 방공호가 해외에 설치되는 것은 이례적으로, 대만 유사시를 상정한 위기관리태세 강화 목적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대만에 대해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작년 12월에는 대만 포위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이 대만 통일과 관련해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만에 비상사태가 발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것이다.

다만 일본대만교류협회 측은 산케이에 “시설 경비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대답을 삼가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